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윤병갑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압축 고도성장에서 오는 작금의 잔해물 즉 사회적 병리현상은 우리가 진정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을 안고 갈수는 없지 않은가. 미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세척할 것은 세척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야 할 결 가버은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참모도 복잡다단한 일들이 유독 많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5월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갈망한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은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공통분모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의 생존전략이면서 패러다임인 것이다.

각자이면서 종교계의 리더인 분들께서 폭로전에서 파부었던 발언들이다. '툼살툼은 갖지만 성매수는 안했다', '폭로한 스님에 대해 '너는 떼뻐하냐', '판돈이 300만~400만원에 불과했다'는 등의 말들이 당사

## 근심지영(根深枝榮)

모 저축은행 행장의 밀항시도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012년부터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9대 총선결과 모 정당의 상황과 제도에 대한 불신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국회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자는 물론 조계종 입장을 변론하는 가운데 터져 나온 발언들이다.

또한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최근 그리스소크, 가계 및 국가부채 위험과 둔화되는 실물경제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조만간 위기에 보의 시간대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 연구원이 공동으로 위험예측모형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감히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싶다.

경제적 어려움 또한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기인한다. 일제식민지와 6·25전쟁 후 우리의 GNP는 70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우리였다. 세계역사에서

100년이 뒤졌던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당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가로 일어난 나라는 147개 국가가 된다. 146개 국가는 지금도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안팎에서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만이 2만 달러를 넘어 지원받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GDP 1조1600억 달러로 세계 15위, 무역 세계 9위, 조선 1위, LCD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등. 이렇듯 세계 속의 한국경제는 작지만 강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앞에서 다시 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희망 찬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단연코 근심지영(根深枝榮)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근심지영이란 직역하자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가 영화를 누린다' 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말은 한 가정의 가장, 기업의 최고경영자, 더 나아가 국가의 통치권자는 태평보다 더 강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진정으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직원, 그리고 국민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개인의 영달이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리더는 곤란하다.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그래서 어려움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신바람나는 희망의 오늘을 불러일으킬 리더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19대 국회와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생산성정부 호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정부, '남해안 선벨트' 개발 의지 있거나 하나

구호만 요란한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돈이 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남해안 선벨트는 전남과 경남, 부산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구에 걸친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물류·관광 허브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24조3000억 원에 이른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전남에는 여수 사도 생태섬, 고흥 우주해양특구 등 67개 사업이 반영됐다. 하지만, 현재 국고 지원은 181억 원에 그치고 있다. 계획과 구호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은 '실전강 100리 테마로드' 등 3건이 고작이다.

정부는 진도항 배후지(예산 4705억 원), 고흥 우주랜드(290억 원) 등 총 7건

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남해안 선벨트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제도 뒷받침도 안돼 민간투자마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3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남해안 선벨트는 계획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프로젝트 수가 300~500개에 달해 혼란을 겪었고 최종 166개를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각 지자체가 이미 추진중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과 산업과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시행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어등산 골프장 우선 개장 '특혜' 안 된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강은태 광주시장이 '골프장 우선 개장 불가' 입장을 천명한데다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관광단지 TF팀도 '특혜 논란'을 우려해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인 (주)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 회원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겠다는 골프장 우선 개장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사업단지 중 골프장을 제외한 12만8000평을 사업자로 부터 기부채납 받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상안도 TF팀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자가 최근 시에 접수한 골프장 부분 준공 신청서를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골프장에 대해서만 준공 신청을 한 것은 어등산관광단지의 부분

준공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 사업자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골프장 우선 개장 승인'을 사실상 불허한 셈이다.

TF팀 역시 기부채납 형식의 광주시 개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광주시와 의회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육군 포병학교 포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시민 휴식공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양받아 민자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 상황에서 골프장만 먼저 개장한다면 사업자만 특혜를 받고 지난 2005년 당시 '어등산관광단지 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와 함께 완공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초 협의 취지와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선례를 남기고 원칙을 무너뜨릴 뿐이다.

## 無等鼓

에베레스트(8,848m)에 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등반로인 남동릉에는 정상 바로 아래 수직의 바위벽 구간이 있다. 남봉(8,600m)과 정상의 중간 8,760m 지점에 위치한 길이 12m의 이 마치발 관문은 산악인들은 '힐러리 스텝(Hillary Step)'이라고 부른다. 초등자인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53년 5월 29일 정상을 눈앞에 뒀던 세프와 텐징 노르가이는 이 곳에서 힐러리를 30분이나 기다렸다가 탈진한 그를 도와 함께 올랐다. 그리고 첫 등정의 영광을 양보했다. 네팔인들이 이 지점을 '텐징의 등'이라 일컫는 이유다.

당시만해도 원시적인 장비에 도전자적 드물었지만, 1990년대 이후엔 세계 최고봉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등반대가 몰리면서 이 부근은 자주 병목(bottleneck)이 되어버리곤 한다.

1996년 5월 10일엔 급기가 대참사가 벌어진다. 정상에 오른 33명 가운데 12명이 갑작스런 기상악화에 미처 하산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이다. 각각 원정

대는 물론 수천만원씩 받고 일반인을 정상까지 올려주는 상업등반대까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집중된 것도 한몫을 했다. 이 처절한 사고는 당시 상업등반대의 일일요율에 정상이 올랐던 존 크라카우어의 저서 '희박한 공기 속으로'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

에베레스트엔 매년 봄 100여팀이 몰리고, 등정자도 수백명명에 이른다. 게 세프와 텐징 노르가이는 이 곳에서 힐러리를 30분이나 기다렸다가 탈진한 그를 도와 함께 올랐다. 그리고 첫 등정의 영광을 양보했다. 네팔인들이 이 지점을 '텐징의 등'이라 일컫는 이유다.



힐러리 스텝

지난달 19일 한국 인 원정대원을 포함 해 봄 시즌에도 이곳에선 4~5명의 산악인이 사망·실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역시 등반로 체중이었다. 인류의 첫 도전 이후 32년만에 꿈을 이룬 힐러리는 이같은 정체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진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법조칼럼



김성주

### 국민을 보호해주는 국가, 그리고 판결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 정도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과목에서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이라는 점, 영토가 지리적 경계를 이루며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된다고 배운 기억이 난다.

'국가'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분석하고 논의해 왔다.

20세기의 '국가' 개념은, 정부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든 강제에 의존하게 되므로 유희해까지 한다는 무정부주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에 책임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복

지국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혼란스럽게까지 하다. '국가'의 개념이나 정의, 기능 등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자기 국민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일 것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생각하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떠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과 원곡 피해자 2500여 명이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적 시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또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8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들의 상고심에서 원

고들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들을 원고들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의 일부 원고들은 1999년 일본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強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 판결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담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해서도 "구 전범기업인 구 일본제철

이나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현재의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일본 법원과는 다른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나라의 힘이 없어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를 겪어야 했던 당시의 우리 국민, 특히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본다. 그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짙어졌을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회계약론'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루소는 '국가의 권위란 군주의 통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의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주권은 국민 자체이며, 법이란 다른 아닌 전제 국민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400여 년 전에 살았던 루소의 논으로 보았을 때에도 주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국민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한 세기의 판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늦게나마 바로잡고,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정의의 선언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맡은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임할 것을 다짐해 본다.

(광주지법 민사4부 부장판사)

## 기고



조호권

###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은 정책과정별 정책의제의 형성 단계인 조례입법권, 정책대안의 분석 및 평가와 정책결정 단계인 예산심의·의결권,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및 시정조치 단계인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결산감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회가 정책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이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기능은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중요한 기능으로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기술성을 요한다면, 지방의회는 대표성과 책임성, 즉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정치적 책무를 가지게 된다.

지방의회가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농

고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는 다른 의미에서 주민과의 다양하고 빈번한 접촉기회를 가지며, 관료주의적 틀에 얽매지 않고 창의적 발상을 통해 정책의 발굴과 개발의 단계에서부터 보다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방의회 정책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기관분리형, 즉 '전체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미약하다.

또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치권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 각 지방의회별로 상이한 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20년이 넘는 지금,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와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방의회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보좌진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이 전문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운영 및 전문위원제도의 개편과 증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

행기관의 통제능력의 향상 및 정책기능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자체의 조사·연구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건비 독립과 함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의정보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행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라는 장기적인 과제와 해결과 함께, 단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